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86.38	↓ 코스닥	812.23
	(-28.90)		(-0.65)
↑ 금리 (한국예 9년)	2.470	↑ 환율 (원·달러)	1385.60
	(+0.007)		(+5.40)



장기요양보험 한계 정부 통합돌봄 전환

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❶ 붕괴된 가족 돌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가 연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 가족 돌봄 붕괴…재정 시한폭탄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의 20.3%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는 29.3명으로 약 41년 뒤인 2066년을 기점으로 100명을 초과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인구 1000만명… 부담 급증
장기요양보험, 10년 내 적자 우려
가족 돌봄 붕괴, 사회적 책임 증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제도 추진

고령화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돌봄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18.2%로 나타났다. 10년 전 31.7%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47.3%)보다 13%p 상승한 60.3%였다.

돌봄을 위한 국가 재정 역시 녹록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40조9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연평균 10.2%씩 늘어 오는 2027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득 대비0.9182%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2024년 말 4조9000억원(4.8개월분)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때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해 203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범…노인 요양인력 기준 강화

가족돌봄이 사라지고 재정이악화하면서 정부는 통합돌봄 시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00개 시군구에서 131개로 확대했다. 오는 2026년3월 전면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자체가 전담조직·사례관리·재택의료를 한 계좌에 묶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 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기존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한다. 법무부와외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비자(E-7) 변경을 허용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자사주 소각 의무화… 행동주의 힘 실린다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강조 장기적 기업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된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까지 공포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행동주의펀드들은 주가가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보다 단기 차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 ‘자사주 소각’ 핑곗거리 생긴 행동주의 펀드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주가는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막대한 현금을 쥔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행동주의펀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이들의 먹잇감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한화, 삼양통상, 포스코인터내셔널, LG, 롯데케미칼, 한진칼, LS, 한화솔루션 등 10곳은 자사주를 늘리면서도 3년간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고, 최근 3조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2조8119억원어치를 소각기로 했다. LG는 내년까지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에 있어 자사주 제도 개선은 늘 핵심적인 쟁점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 “기업 투자 여력 떨어뜨려” 지적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정도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 국내 기업은 2021년 27곳, 2022년 49곳, 2023년 77곳으로 급증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신문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성료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의 두번째 모임이 1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장효진 KB손해보험 파트장, 김도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박재신 우리은행 부장,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순우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김윤일 증권금융 상근감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 설 것”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與, 물가·폭염대책 현장 점검 온라인도매시장, 밥상 물가의 열쇠 유통단계 축소·투명화 실현 플랫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

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신속 입법… 북한, 주적 아냐” /사진 뉴시스
-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 과제로 추진”

- ▲통일연구원장 “통일부 명칭서 ‘통일’ 삭제는 매우 부적절”
- ▲기재부, 낭비성 예산 과감히 줄여 국정과제 재원 마련한다

- ▲오세훈, ‘5선 서울시장’ 도전 시사… “시민들 판단 지켜볼 것”
- ▲대통령실, 강선우·이진숙 사퇴론에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판단”